

韓권한대행 '내란·김건희특검법' 수용 여부 촉각

지난 19일 양극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할지 여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2·3·5·6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을 향한 민주당의 특검법 공포 압박은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읽힌다. 2개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특검)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며 "즉시 (특검법 공포를) 실행하기를 바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역시 24일까지 마칠 것을 요구했다. 비상계엄 사태 상설

野 "24일까지 공포안하면 즉시 책임 물을 것" 탄핵 시사
與 "野특검법, 국정마비 속셈...조기대선 염두 정치 탄압"

특검 수사 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놓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질문에 "국정 안정과 내란 진압이 충돌하면 후자가 우선"이라며 "총리가 탄핵돼도 후순위 (국무위원)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진상 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 데도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권 권한대행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을 거론하며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수막 찢는 광주시민들

지난 21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과 사회 대개혁 쟁취를 위한 7차 광주시민총결기대회'에서 시민들이 내란범죄자 윤석열 체포·구속·파면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현수막 찢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재기 기자

'여야정협의체' 국정 주도권 놓고 진통 우려

멤버 구성·의제·한덕수 권한 행사 등 기싸움
"연내 70개 민생법안 성과 날 것" 전망도 나와

여야 정치권이 '여야정협의체'를 띄우는 데 합의했지만 쟁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불가피해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여야정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자 등 4두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4두 체제' 가운데 우원식·한덕수·권성동은 이견이 없으나 민주당 대표로 누가 참여하는 지에 대해서는 시작 전부터 기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협의체를 통해 입법 등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국 수습 등 보다 거시적인

논의를 위해 당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 의장은 '여야정협의체'의 목표, 범위, 일정, 주요 이해관계자 등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키오프' 회의 때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되, 추후 운영 과정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멤버로 들어가는 일종의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문제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미루거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입장 차가 뚜렷한 의제도 협의체 가동의 변수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을, 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 요구 및 추가

경정예산 연초 편성, '내란 특검법' 공포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경 조기 편성 및 내란 특검법 등엔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새 장관 임명에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일단 협의체만 가동된다면 연내 민생 법안 처리 등 성과가 차례로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비공개 회동을 통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민생법안 70여건을 재추진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불법 사채 금지법, 중소기업·소

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관련 법안 등이 거론된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를 한 양곡관리법과 국회중견감정법 등 6개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우 의장이 제안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에 여야 의원 외교단 파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 기자

함양2025나눔 캠페인
기부로 나눔 가치있게
광주전남을 가치있게!
성금접수 계획
광주 사랑의 열매 : 053-107-999990 (광주은행)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 사랑의 열매 : 301-4000-3000-01 (농협은행)
전라남도공동모금회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앞자리에 한국전력